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39
----------	------

발의연월일 : 2024. 10. 4.

발 의 자 : 황정아 · 이기현 · 박정현  
장철민 · 노종면 · 황명선  
김남근 · 강득구 · 조계원  
김 현 · 이건태 · 문금주  
김동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

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4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u>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4제</u>  <u>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u>  <u>도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에게</u>  <u>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u>  <u>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u>  <u>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p><u>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u>  <u>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u>  <u>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u>  <u>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u>  <u>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u>  <u>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u>  <u>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u>  <u>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u>  <u>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u>  <u>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u>  <u>금을 징수한다.</u></p> <p><u>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u></p>

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신 설>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  
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  
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  
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  
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  
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  
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

<p><u>&lt;신 설&gt;</u></p>	<p><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50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u></p>
---------------------------	--